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2014.10.30 | 이상동_새사연 부원장 | sdlee@saesayon.org

올해 4분기 각종법률이 무더기 졸속 처리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국회의 활동 경험으로 볼 때 3년차 하반기는 사실상 법률안 처리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한다. 2012년 시작된 제19대 국회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국회의원의 마지막 임기 해에는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다가올 총선을 맞이하여 선거캠페인에 몰두하면서 법률안 발의와 심사 등의 활동이 소홀해지는 것이 관례로 굳어지고 있다. 즉 이전 국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제19대 국회 역시 3년차인 올해 하반기에 다수의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 (필자 주: 법원에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정치 개입’ 이라고만 일러둔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각종 법률안 처리가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현 시점 이번 제19대 국회에는 총 11,527 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0,858 건, 정부제출 669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8,207 건의 법률이 미처리(계류) 상태에 있다. 무려 71.2%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



표 1. 제19대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류)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계	원안	수정		계	대안반영 폐기	폐기			
의원 발의	10,315	2,918	1,149	755	394	1	1,647	1,576	71	121		7,397
정부 제출	605	373	209	73	136		164	163	1			232
총계	10,920	3,291	1,358	828	530	1	1,811	1,739	72	121		7629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표2. 제 19대 국회 법률안 처리 관련 주요 지표¹⁾

- 의원 발의 법률안 비율 94.5 % (나머지 5.5%는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
- 법률안 처리율 30.1%
- 법률안 가결율 12.4%
- 국회의원 1인당 발의 건수 34.4개

법률안의 무더기 졸속 처리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각종 쟁점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게 만든다. 불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국회 내 소수 입법권자의 관점에 의존하는 법률절차를 공고화하고, 통합적 시각의 개혁안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익 집단의 개입을 수월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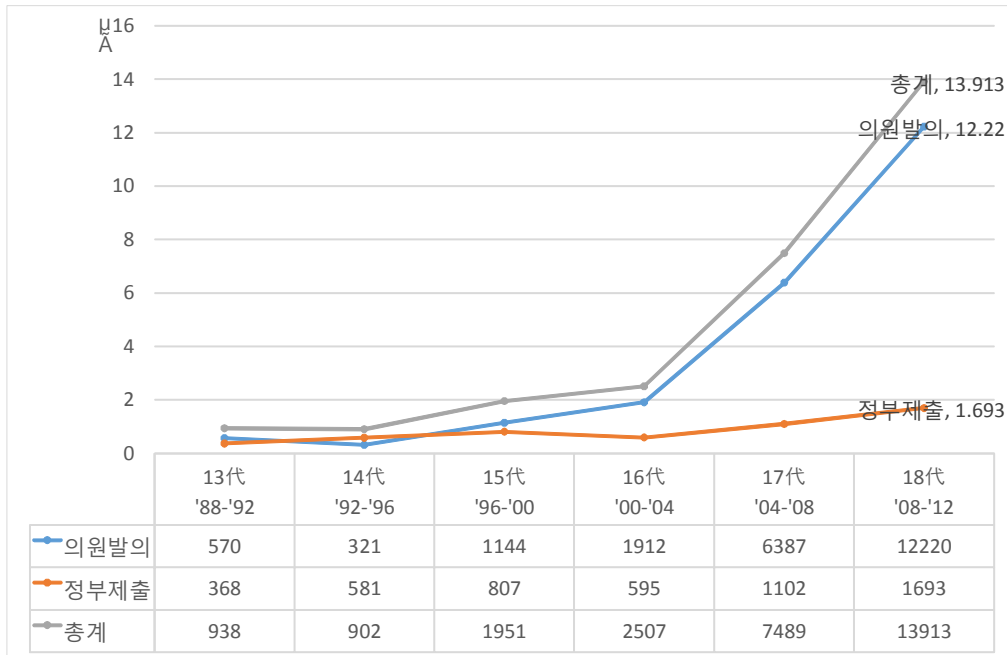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법률안 발의, 좋은 현상인가?

다음 그림은 최근 법률안 접수 추이를 나타낸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 진 이후부터 지난 18대 국회까지를 정리하였다. 법률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양적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3년차 마지막 회기 이전까지 기준.(2012년 9월 1일 ~ 2014년 8월 31일)



그림 1. 13대 이후 국회 법률안 발의 ('88~' 12)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입법 활동이다. 그러나 실적주의에 지나치게 매달려 자신이 제출한 법안 발의 건수에만 신경을 쏟고 법안 심사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작 정부제출 법률안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이 크게 늘면서 현재 비중이 87.8%로 집계된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는 정부부처와 국회 전문위원 등을 출석시켜 놓고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대부분의 법률안들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국회의 법안심사 소위 현장은 충실한 법률안 검토와는 꽤 멀어 보인다.

국회의원, 실적주의를 버리고 민주적 공론토론을 활성화하라

각종 법률안들이 밀려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대충,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국회가 종종 보여주는 '법률처리의 압박감'은 기실 없어야 할 관습이라고 본다.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처리함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그것의 지속적인 공개,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10월 2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강세진,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 등교,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	이은경
주거	9/16	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세진
주거	9/22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강세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이수연
보건복지	9/26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이은경
노동	9/30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질적 측면 제고해야	김수현
사회적경제	10/10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이수연
복지	10/14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 소득·자산 의미 없다	이은경
노동	10/16	2014년 9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10/20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강세진
복지	10/21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이은경
정치일반	10/30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이상동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